

---

#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2023. 2. 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 순서

I. 평가 개요 .....	1
II. 기관별 종합 평가 .....	3
III. 부문별 평가결과 .....	5
1. 주요정책 .....	6
2. 규제혁신 .....	22
3. 정부혁신 .....	28
4. 정책소통 .....	34
5. 적극행정(가점) .....	39
IV. 후속조치 계획 .....	44

# I.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45개(장관급 24, 차관급 21)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

□ 평가부문 · 방법

- (평가부문)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
  - \*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3점)를 가점으로 합산
- (평가방법) 부문별 평가주관기관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상 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평가 및 일반국민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병행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주관	평가단(명)	일반국민(명)
주요정책	50	160개 주요정책과제 추진성과 등	국조실	100	20,400
규제혁신	20	규제혁신 성과·체감도 등	국조실	15	1,929
정부혁신	10	기관의 혁신역량 및 성과, 체감도 등	행안부	18	11,076
정책소통	20	정책소통 활동 및 성과, 체감도 등	문체부	81	(20,400*)
적극행정 (가점)	3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성과, 체감도 등	인사처 국조실	10	1,586
합계				224	34,991

\* 주요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대상자에 대해 정책소통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

□ 추진경과

- ('22.3월) '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 ('22.10월) 새정부 국정기조를 반영,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2~'24년) 및 '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 수립, 국무회의 보고
- ('22.10월) '22년도 평가 세부지침 수립,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
- ('22.10월) '22년도 평가 부처설명회
- ('22.12월) 부문별\* 평가 시행
  - \*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가점)



## Ⅱ. 기관별 종합 평가

# 1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부문별 평가 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각 기관의 국정성과 제고 독려

## □ 평가방법

-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적극행정(가점 3점) 점수를 합산

# 2 평가 등급

## □ 장관급 기관

-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

\* ▲누리호·다누리 발사(과기정통부) ▲농산물 최대 88.3억불 수출(농식품부)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환경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해수부) ▲독립유공자 예우강화(보훈처)

## □ 차관급 기관

- ▲국민안전 확보노력 강화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

\* ▲국정과제의 신속한 법제화(법제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식약처) ▲최대규모 방산수출(방사청) ▲기후변화 대응 新작물 발굴(농진청) ▲최다 산불로부터 국민생명 보호(산림청) ▲지진 대응체계 강화(기상청)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
C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



### Ⅲ. 부문별 평가결과

# 1. 주요정책 (50점)

## 1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 45개 중앙행정기관이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22년에 역점 추진한 기관별 주요정책 과제\*의 이행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

\* '22년 총 160개 주요정책과제 선정·평가(장관급 기관 4~5개, 차관급 기관 2~3개)

###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 평가방법

- 과제별로 ①정책효과에 대한 정성평가, ②이행노력·목표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 ③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 도출
  - (정성평가)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10개 분과, 100명)이 평가
  - (정량평가) 기관별로 제시한 계획이행, 목표달성 정도에 대해 평가
  - (만족도) 일반국민 20,400명 대상으로 과제별 정책 만족도 조사
- 기관별 국정현안 대응, 갈등관리, 지시사항 이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가점 및 가감점 도출



## □ 평가지표

○ 이행노력(30%), 목표달성도(30%), 정책효과(30%), 국민만족도(10%)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이행을 위한 투입노력, 절차·시한 준수 등</li> <li>- 과제별 이행계획 완수 여부, 기관장 노력, 입법 노력 등 기관의 성과창출 노력</li> </ul>	정량/ 정성	30%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에 설정된 목표치 달성여부</li> <li>- 성과지표로 표시된 목표치 또는 완수해야 할 세부목표 달성 여부 등</li> </ul>	정량/ 정성	30%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효과</li> <li>-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효과 등</li> </ul>	정성	30%
국민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 소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전문리서치 기관 조사)</li> </ul>	정성	10%

○ 국정현안 대응 노력 평가 (가점 5점 반영)

\* 기관의 국정현안과 관련된 선제적 조치, 위기 적시대응, 혁신적 정책시행, 부처간 협업, 기관장 노력 등에 대해 평가

○ 갈등관리, 지시사항 이행 평가 (가감점 1점씩 반영)

\* 기관별 ▲적극적·선제적 갈등관리 노력, 갈등 해소·완화 성과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 수립의 충실성, 집행 이행도 등에 대해 평가

##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산림청, 기상청, 행복청
B	기재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새만금청, 해경청
C	국방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인사처, 병무청, 경찰청, 원안위

## '22년도 주요 성과

❖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경제 안정화 도모, 과학기술 혁신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과 농어업 성장 여건 조성

- 복합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화 도모,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및 지출 재구조화 등 건전재정 기반 마련
- 우주 7대강국 도약,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강화 등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공부문 효율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공급기반 확충으로 국민 주거안정 도모, GTX 신속 추진 및 간선도로망 체계 개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
- 농산물 최대 수출 실적(88.3억불) 및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농어업 성장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 노동개혁·탄소중립 여건 조성 및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

- '23년 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5.47%), 부모급여 도입 및 기초연금 지급금액·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복지 강화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전문가 논의기구를 통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선 권고안 도출로 노동개혁 기반 마련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탈플라스틱 대책 수립 등 과학적·실용적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
- 반도체 및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수립, K-콘텐츠에 대한 정책금융(5,268억원)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국격에 맞는 법제 정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경제·민생범죄에 적극 대응

- '만 나이' 통일 및 경제 형벌규정 개선 등 국격에 맞는 법제 정비,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정립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으로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
- 7대 악성사기 척결,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 마약범죄 수사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

❖ 국익·실용의 외교전략을 통한 주변국과 신속한 관계발전 도모 및 국방혁신 강화로 안보 역량 제고

- 정부출범 후 최단기간 내 한·미정상회담 개최(22.5월)를 시작으로 미·중·일 3강 외교 신속 복원
- 한·아세안 연대구상, 독자적 인·태 전략 발표 등으로 외교지평 확대
- 한국형 3축체계 강화로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제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안(22.12월)을 토대로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국방혁신 도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외경제 여건 악화,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주요 경제입법 조속 추진 등 정책적 노력 배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역할 확대 등을 통한 노동개혁 공감대 확산, 교육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한 소통노력 지속
-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 소통 노력 강화
- 군사안보상황 대비태세와 사후조치 철저,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교류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검토

## 경제 분야

- ❖ 대내외 리스크에 적기 대응, 물가·금리·환율 등 경제안정화 도모
- ❖ 첨단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혁신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 ❖ 국민 주거안정, 교통 인프라 및 농어업 성장기반 확충

## 주요 성과

-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도모 및 건전재정 기반 마련
  -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속에 ▲비상경제대응체계 가동 ▲물가\* 및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도모
    - \* 주요국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 '22.11월) : (韓)5.0 (美)7.1 (OECD)10.7 (EU)10.1
    - \*\* (금융) 회사채 시장 경색, 50조원+a 유동성 지원대책 마련('22.10월) → 회사채 금리 하락 유도 (외환) 한미 정상회담('22.5월), 재무장관 양자면담('22.7월) 등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 도모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지출 재구조화\*\*\* 등 건전재정 기반 마련
    - \* '22~'26년 기간, 관리재정수지 △2%대 중반,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 이내 관리를 목표로 설정
    - \*\* 관리재정수지 한도 △3% 이내 관리,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하는 법안 추진
    - \*\*\* 집행부진 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등 재정지출 재구조화로 24조원 규모 재원 마련
- 과학기술 혁신,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공부문 효율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 ▲우주 7대강국 도약\*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정립\*\* ▲6G·양자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강화 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 지속성 확보
    - \* 독자 우주발사체(누리호) 2차 발사, 다누리호 달 궤도 진입 성공 등
    -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
  - 첨단전략산업 육성체계 구축\*, 주력산업 고도화·저탄소 공정혁신\*\*으로 제조업 성장기반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등 합리적 에너지믹스 수립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22.8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출범('22.11월)
    - \*\* 클린팩토리 구축 확대, 제조업 그린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R&D 신설(8년간 국비 7천억원) 등

-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22.12월) 등을 통해 공정경쟁 및 시장경제 활성화 도모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7월)을 마련, 5대 분야\* 효율화를 통해 예산 총 1.1조원 절감('22년 하반기~'23년)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715건)
  - \*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농·어업 성장환경 조성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공급기반 확충으로 주거안정 도모\*, GTX 신속 추진 등 교통인프라 확충\*\*, 화물연대 원칙 대응으로 산업현장 질서 확립
  - \*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도심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등)
  - \*\* 광역철도·철도네트워크·간선도로망 체계 개선, 교통소외지역 운행손실 지원 등
- 농산물 최대 수출 달성(88.3억불), 가루쌀 산업 활성화로 쌀 공급과잉 해소기반 마련,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으로 농업 성장환경 조성
  - \* 선도기업 육성, 10대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 발표('22.12월)
-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조기 회복\*, 부산항 북항 재개발 적기 추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으로 어촌환경 개선
  - \* '22년 해운매출액(50조원 이상, 잠정),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 등 최대 실적
  - \*\* 생활권 규모·유형별 5년간 3조원 맞춤 지원 → 낙후어촌 경제활동 기반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

□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납세·관세행정 개선으로 국민·기업 편의 제고

-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위해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22.6조원), ▲대출·보증(8.7조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32.1조원)
-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편의 제고\*, 관세규제 개선\*\* 및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기업활동 적극 지원
  - \* 근로자 동의시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편의제고('22.10월)
  - \*\* 수출입·보세 규제 완화로 첨단산업 물류·통관 비용 연간 272억원 절감, R&D소요시간 5만시간 단축 효과

## 개선·보완 필요사항

### □ 부동산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 추세이나,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인한 가계·기업부실 및 역전세 등으로 세입자 피해 우려

☞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가계·기업 부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세입자 보호 강화 등 서민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 □ 주요국의 자국 중심 경제안보 추세 대응노력 강화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전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의 新무역장벽이 강화되며 우리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 주요국 정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조속 마련

- 플랫폼 생태계 자율규제,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 시장질서 공정화 및 정보보안 강화 등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자율규제 인센티브 강화(공정거래법),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개선(등급제 도입) 등 추진

☞ 카카오 사태 등 디지털 재난·위협에 대비, 플랫폼 기업 독과점 방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안정성 확보대책 병행

###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경제입법 조속 추진

-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 시급

☞ 법안별 주요쟁점에 대한 국회 설득노력과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23년 중 조속 입법 추진

## 사회 분야

- ❖ 사회적 약자부터 빠짐없이 더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적극 추진
- ❖ 노동개혁·탄소중립 여건 조성,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 성장기반 확충

### 주요 성과

-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복지 강화 및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
  - '23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5.47%)\*,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기준 중위소득 26% → 30%) 등 저소득층·취약계층 보장 강화
    - \* 생계급여 수급자 3.9만 가구 증가, 생계 급여액 증가(4인가족, 월 최대 154만원 → 162만원)
  - 부모급여\* 도입으로 출산·양육시기 경제적 부담 완화,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노후소득 기반 강화
    - \* (현행)만 0~1세 월 30만원 → (23)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 (24)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 (지급액) '21년 30만원 → '22년 307,500원 → '23년 321,950원/ (대상자) '21년말 597만명 → '22.6월 612만명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여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 \* 주택·금융부채 공제 도입을 통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연 2.2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 및 법·질서 기반 노사관계와 노동개혁 기반 마련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강화,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
    -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화물차주, IT 프리랜서 등 7개 직종 추가 적용
    - \*\* 구직자(경력개발 유형별)·기업(구인애로 유형별) 도약보장 패키지 시범사업 착수('22.8월)
  - 불법쟁의 행위 원칙 대응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감소\*, 전문가 기구를 통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선 권고안 도출\*로 노동개혁 기반 마련
    - \* 정부 첫해 근로손실일수(5.10~12.31) : (박근혜 정부) 61.4만일 → (문재인 정부) 80만일 → (윤석열 정부) 22.9만일
    - \*\* ▲(근로시간)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직무·성과 중심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추가과제)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등

□ 과학적·실용적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발표('22.10월)로 정책 방향성 제시,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22.12월)로 탄소중립형 경제생태계 구축
  - \* ▲ 책임있는 실천 ▲ 질서있는 전환 ▲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12대 과제
-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22.9월)으로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수립('22.10월)
  - \* ▲ 열분해유의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위한 재활용 유형 신설 ▲ 폐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 \*\* 플라스틱 재생원료 및 대체소재 확대 등으로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 추진(~'25년)

□ 첨단산업 인재양성,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 반도체 및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수립하여 첨단인재 양성 기반 구축\*\*
  - \*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2.7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2.8월) 수립
  - \*\* 「(가칭)국가인재양성 기본법」 제정안 마련('22.12월)
-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대학의 혁신\*과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지원
  - \* 대학 설립·운영 4대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규정 개정안 및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폐지방안 마련('22.12월)
  - \*\* 첨단분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도입 근거 마련('22.9월),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대상 확대 추진
- '22년에 드라마펀드 신설(400억원) 등 총 5,268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K-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집중 육성\*하여 해외 진출 지원
  - \* 온라인 K팝 공연 제작지원 등 장르별 맞춤형 지원(인재-인프라-창·제작-해외진출 등)

□ 과학적 방역관리, 먹거리 안전, 신속한 재난통보 등으로 국민안전 확보

- 코로나19 대비 충분한 방역·의료 역량과 과학적 유행 예측, 개량백신 접종 등으로 방역상황을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
- 식품소비 환경 변화(배달·새벽배송 등)에 대응한 먹거리 안전망 확충\*, 위해수입식품 국내 유입 차단 등을 통해 건강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
  - \* 배달음식점 점검 및 배달함 위생관리 실태조사 강화, 새벽배송업체 물류센터 내 농산물 신속검사실 운영 등
- 지진 통보시간 단축\*, 태풍·호우 등 위험기상 감시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 \* 규모 4.0 이상 지진속보 : (기존) 20~40초 → (개선) 5~10초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강화

- 노동정책 의제에 대한 법정 소통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측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 : (19) 4회 → (20) 3회 → (21) 3회 → (22) 1회(서면)

☞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 교육개혁 추동력 제고를 위한 정책소통 강화

- 교육과정 개정,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등 주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과의 사전 공감대 부족으로 불필요한 논란 발생

☞ 교육개혁 추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정책발표 이전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공감대 형성

### □ 미디어 통합 발전을 위한 기관간 협업 강화

- 미디어 통합 발전 컨트롤타워 설치 및 통합 법제 마련 위해 기관별로 소관법령을 제·개정 중이나, 기관간 협의는 미흡

\* ▲(과기부)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중 ▲(문체부)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 추진 ▲(방통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추진

☞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협업으로 미디어 통합발전 전담기구를 조속 설치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 □ 아동·청소년 자살문제 대응 강화

- 아동·청소년(0~17세)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0~17세 아동·청소년 10만명당 자살률 : (19) 2.1명 → (20) 2.5명 → (21) 2.7명  
- 특히 12~14세 청소년 10만명당 자살률은 '20년 3.2명에서 '21년 5.0명으로 크게 증가

☞ 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고위험군 조기 발굴, 맞춤형 심리상담, 생활주변여건 개선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

## 일반행정 분야

- ❖ 국격에 맞는 법제 정비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 및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

### 주요 성과

- 국격에 맞게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만 나이' 통일('22.12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 발표\*('22.8월) 등 높아진 국격에 맞게 법제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이민정책·시스템 구축\*\* 추진
    - \* 물류시설법·식품위생법(형벌규정 폐지 → 영업정지 등으로 같음), 공정거래법(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등 17개 법률 32개 형벌조항 개선
    - \*\* 농어촌·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비자·국적 제도 개선('22.9~12월)
  - 청년 경제활동 촉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등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중점 지원해 새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 확보
    - \* '학위 취득 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관련 32개 대통령령 개정('22.8월 공포·시행)
  - 보훈대상자 보상금 '08년 이후 최대 인상('23년 5.5%),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 \* 역대 정부 최초로 윤동주 시인 등 젊은 나이에 순국한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 대상
-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재정 책임성 확대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22.9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확충\*\*해 국민 편의 제고
    - \* 정부·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 8,469건 추가 개방('22.5~12월)
    - \*\* 국민비서 구베 이용자 1,500만명 돌파('22.10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21년 24종 → '22년 59종)
  -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245개 통폐합 대상 확정), 통합활용 정원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재배치로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
    - \* 기능쇠퇴분야 인력 재배치로 마약수사, 디지털서비스 등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인력 452명 보강('22.12월)

- 건전재정 기초의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수립('22.9월)하고, 지방 보조금 및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강화\*\* 등 지자체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 \* 건전·투명한 재정 운용, 안정적 세입 확보,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 등 5대 전략 마련
  - \*\* ▲수기로 관리해 온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개통('22.8월, 1단계 예산편성)
    -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예산항목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토록 제도개선('22.7월)

□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경제·민생범죄에 적극 대응

- 7대 악성사기 척결\*,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22.10월)\*\*, 특별수사팀 설치('22.11월)를 통한 마약수사 강화 등 경제·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
  - \* 사이버·전세 등 7대 악성사기 특별단속기간('22.8~10월) 중 9,883건, 13,141명 검거
  - \*\*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호 개선 등
- 집단·반복적인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국토부·경찰청 등)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22.10~11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
  - \*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명) : ('21) 36 → ('22) 56 (55.6%↑)
  - 소음기준 위반 조치건수(건) : ('21) 337 → ('22) 1,042 (209%↑)

□ 자연재난 피해지원 강화 및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집중호우·태풍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응급복구비\* 긴급 편성 및 재난지원금 상향 지원\*\*
  - \* (목적예비비) 500억원 긴급편성, (재난안전특교세) 322억원
  - \*\* 주택(만원) : (기존)반파800·전파1,600 → (상향)반파1,000~1,800·전파2,000~3,600
  - 소상공인(만원) : (기존) 200 → (상향) 500(지자체 재해구호기금 200 + 정부지원금 300)
- 재난현장 관련 교육훈련 강화 및 장비 첨단화로 소방 핵심역량 제고
  - \* 현장 중심 지휘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인증제 도입, 전국 시·도에 재난유형별 특수장비 배치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22.7월), '우회전시 일단 멈춤'('22.7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시행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 \* 전년동기('22.7~12월)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6.0%,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27.5% 감소
- 민관 공동 방제대응 및 현장 중심 신속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선박·시설 관리 강화\*\* 등으로 해양오염 감소 (오염물질 유출량 20.5% 저감)
  - \* 취약해역 5개 해양경찰서 '24시간 현업부서 신설' 및 방제함정 '필수운항요원제도' 도입
  - \*\* 기름저장시설 및 유조선 중점 점검, 장기간 해상 계류된 취약선박 점검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 다중운집사고 재발방지대책 이행 철저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 및 정부의 사후대응을 두고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1.27)이 향후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반복적 점검 등 철저히 관리

### □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 소통으로 국민불안 해소

-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존 원전 수명연장, 신규 원전 인허가 결정이 필요하나, 대국민 소통노력 부족으로 안전성 논란 지속

☞ 과학적 정보를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 소통을 통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 □ 공공부문 내 이해충돌방지 제도 확산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월)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법령해석, 교육·홍보, 위반신고 접수·처리 등 관련 업무추진 제한 우려

☞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인력 보강, 전문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노력 강화

### □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 노력 배가

-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및 위원회 정비 관련 법안 등 다수의 국정과제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국회 계류 중\*

\* 총 44건 법률(일괄법률안 32건, 개별법률안 12건) 중 3건(일괄 1, 개별 2) 통과

☞ 국회 설득노력 및 입법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추진속도 가속화 필요

## 외교안보 분야

- ❖ 국익·실용의 외교전략으로 주변국 관계발전,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추진
- ❖ 국방혁신 강화를 통한 안보역량 제고 및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추진

### 주요 성과

- 미·중·일 3강 외교 복원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 확대
  - 정부출범 후 최단기간 내 한미정상회담 개최('22.5월),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22.9월) 등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공고화
    - \*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미국 공식서열 1~3위인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모두 訪韓
  -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미래발전 공동보고서' 발표('22.8월), 한·일 상호 무사증 입국제도 복원('22.11월) 등 동북아 주변국 간 실질협력 강화
  - 아세안·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국가와 방산·원전분야 실질협력을 강화하여 국익 극대화 도모
    - \*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 조성 및 기후변화·보건·디지털 격차 등 분야별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및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22.11월)
-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동참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추진
  - NATO 정상회의('22.6월), UN총회\*( '22.9월), 한·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22.11월) 참석·연설 등 통해 보건·기후변화·개발협력 등 국제논의 주도
    - \* 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위기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해외백신 공여, 우크라이나 등 취약지역 대상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 국제평화구축 활동 재정지원\*\*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 실질기여 확대
    - \* 우크라이나 지원금 1억불을 포함하여 취약지역 40개국 대상 2,870억원 지원
    - \*\* '22년 유엔 정규예산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률 세계 9위 달성('21년 11위)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국방 핵심전력 확충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정보감시정찰 위성 및 유·무인기 적기 전력화, K9A1 자주포 현장배치 등을 통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제고
  - \* ▲Kill Chain(공격) ▲KAMD(미사일방어) ▲KMPR(대량응징보복)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방안 수립('22.10월) 및 관계부처 협업체계 운영('22.12월)
-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안\*( '22.12월)을 토대로 국방분야 AI 적용 확대, VR·AR 모의훈련 도입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국방혁신 적극 추진
  - \*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AI기반 첨단전력 확보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대 핵심분야 구성

□ 사상 최고의 방산수출 성과 달성 및 방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역대 최대규모인 173억불의 방산수출 성과\*를 달성하고,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방산 수출전략 마련
  - \* 최근 5년간 방산 수출액 평균의 5배 수준으로 13만개 일자리 창출 및 약 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예상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확대\*, 방산혁신클러스터 추가선정\*\*, 혁신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 \* 부품국산화 지원 : ('21) 90건 관련 886.4억원 → ('22) 144건 관련 1,691억원
  - \*\* 드론분야 특화형 클러스터로 대전을 추가선정, 5년간 총 490억원 투입 예정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을 목표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추진

- 광복절 경축사 등 계기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시('22.8월)
  - \*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 초기조치 실시 및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정치·군사분야 포괄적 조치의 단계적 이행방안 마련
- 북한 미사일 위협 등으로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 발표('22.10월), 한미 간 북한 사이버위협 대응 실무그룹 출범('22.8월) 등 대북제재 공조 확대
- 남북 방역협력 제안('22.5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22.7월), 억류자 가족 면담('22.10월)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병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 계속되는 北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역내 방어시스템 공고화

- 현무 미사일 낙탄('22.10월), 北 무인기 격추 실패('22.12월) 등 우리 군 대응전력 부실 논란에 따른 국민신뢰 저하 우려

☞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軍 신뢰 제고를 위한 대국민 소통 노력 필요

### □ 국제기구 선거전략 수립 및 준비 철저

- 16년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실패하면서 과도하게 많은 국제기구 입후보로 국제 교섭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 제기

\* ('21) 10건 → ('22) 14건 입후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23.6월 선거)을 위한 국제 교섭력 강화방안 등 구체적인 선거전략 수립

### □ 병역기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 병역판정검사 사각지대를 이용한 병역 브로커·기피자가 다수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 지속 발생\*

\* 검찰·병무청 합동수사팀, 병역면탈 브로커, 병역면탈자, 가담자 등 23명 기소('23.1월)

☞ 병역판정검사 정밀도 제고, 병역면탈 조장 정보 모니터링 강화, 법 위반자 처벌 수위 상향 등 관련 대책을 면밀히 강구

### □ 남북관계 개선 대비, 교류협력 가능사업 사전 검토

-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 등으로 교류 협력 사업 수요가 급격히 감소\*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장기간 미개최

☞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교류사업 발굴을 위해 남북교류추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협력방향 수립

## 2. 규제혁신 (20점)

### 1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기반 및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 평가대상

- 35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장관급 (21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개보위
차관급 (14개)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원안위

\* 규제심사·규제정비 과제, 부처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기관 확정

#### □ 평가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성·정량평가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별도 구성

\* 정성평가 : 규제혁신 노력·효과·만족도 등 / 정량평가 : 규제혁신 실적치, 달성율 등

\*\*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민간전문가 포함 15명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핵심분야 규제개선 (60)	중점과제 개선 (40)	• 핵심규제 개선	22
		• 네거티브 규제 전환	10
		• 샌드박스 플러스 실적	8
	건의과제 개선 (20)	• 규제개혁신문고 과제 개선	10
		• 현장 규제애로 해소	10
		• 규제심판제도 과제 개선(가점)	+5
규제 품질관리 (25)		• 규제비용감축 성과	12
		•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개선	8
		•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5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15)		• 국민소통(홍보) 실적	7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8

##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조달청, 문화재청, 산림청
B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C	국방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소방청, 해경청, 원안위

### '22년도 주요 성과

- (핵심규제 개선)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구축 및 경제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개선 신속 추진
  -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상징적 규제 개선\*
    - \* ▲(1차) 환경규제혁신방안, 경제형벌규정 개선계획
    - ▲(2차) 문화재·해양수산·디지털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단장:총리) 신설, 부처·연구기관·경제단체와 협업하여 덩어리 규제 발굴 및 검토
  - 민간 중심의 규제심판제도 도입, 중립적으로 갈등규제 해결
    - \*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개선 등
  - 경제규제TF 중심 현장대기 프로젝트 19건 개선, 13.4조원의 투자 지원
- ⇒ 범정부 규제혁신 노력을 통해 1,577건의 개선방안 확정, 688건 개선 완료
- (신산업 규제혁신) 미래산업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 신속한 규제특례 심의를 위해 심의기한(90일 내) 설정, 안전성 검증 후 법령 등 개정계획 통보(60일 내) 의무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 \* ~'22년 총 860건 승인 → 투자 7조원 유치, 매출 3천억원 증가, 고용 9천명 창출
  - 네거티브 전환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범정부 7대 중점 추진분야\* 설정, 부처별 일반 추진분야와 투트랙으로 추진
    - \*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핀테크, 모빌리티, 물류, K-콘텐츠
- (규제품질관리) 규제비용감축제 전격 도입, 중요규제 범위 확대 등 규제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기업의 규제부담 합리화
  -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 하도록 부처별 감축목표 설정·관리('22년 규제비용 감축률 224% 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각 부처의 핵심규제를 신속 정비하고, 현장에 파급력 큰 과제를 집중 발굴·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조속 창출 필요
- 신·구산업 간, 단체 간 갈등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규제 적극 개선

## 4 분야별 평가결과

### 핵심규제 개선

#### 주요 성과

-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등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정비
  -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두 차례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환경, 문화재, 항만 등 핵심규제 혁파**
    - \* (1차, 8.26) **환경규제** 혁신 방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등
    - (2차, 11.9) **문화재·해양수산·디지털산업**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
  -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39개의 덩어리 과제를 발굴하여 2개 과제는 개선방안 발표, '23년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발표 예정**
    - 사례** 인증규제 개선방안(12.22) 및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규제 개선방안(12.23) 발표
  - 민간 주도로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규제심판제도** 도입, 대형마트 상생발전 협약 체결 등 **갈등과제의 전향적 해결** 추진
    - 사례** ▲(산업·중기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 ▲(법무·복지·여가부)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해수부)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운송 규제 등
- 규제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애로가 있는 **현장대기 기업 투자 프로젝트 해소**
  - 경제단체, 개별기업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에 애로가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34건 발굴·19건 개선하여 민간투자 13.4조원 창출**
    - 사례** (A기업) 협력기업에 대한 산단부지 임차 허용을 통해 1.2조원 투자 창출, (B기업) 생분해플라스틱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1조원 투자 창출 등

⇒ 범정부 규제혁신 노력을 통해 **총 1,577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 하고 **688건\* 연내 이행 완료**

\*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 과제 633건, 법률 개정 55건(국회제출 기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핵심규제, 덩어리 규제의 조속한 개선·이행을 위해 소관 부처의 전향적 검토·협조 노력과 국무조정실의 적극적 조정·중재 필요
-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성과 확산·공유 등 적극적인 소통·홍보 노력 필요

## 신산업 규제혁신

### 주요 성과

-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추진 등을 통해 제도 내실화
  - 조속한 실증개시와 법령정비를 위해 ▲심의기한(90일 내) 신설 ▲법령 개정계획 수립·통보(60일 내) 의무화 ▲이해갈등 조정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22.7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가이드라인(22.11월)」 배포
  - ICT융합·산업융합 등 기존 6개 분야에서 순환경제,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등 3개 분야 추가 확대
    - \* 순환경제(22.12월 개정완료), 모빌리티(22.9월 국회발의), 바이오헬스(22.10월 국회발의)
  - '22년도 샌드박스 시행 결과 총 860건 승인으로 7.6조원 투자유치, 3천 5백억원 매출증가, 9천여명 고용창출(22.9월 기준)
    - ▶사례 (산업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금융위)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복지부)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중기부)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등
- 네거티브 규제전환 중점추진분야 선정 등 투트랙(Two Track) 전략 추진
  - 신산업 등 파급력이 큰 규제, 다부처 관련 규제 등을 7대 중점추진 분야로 선정해 주관부처 책임 하에 네거티브 전환 추진
    - \* 7개 중점추진분야(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핀테크, 모빌리티, 물류, K-콘텐츠) 선정 → 규제혁신 로드맵, 부처 규제개선 방안 등에 포함하여 '23년 상반기 순차 발표 예정
  - 네거티브 전환 필요성이 크나 단일부처 규제나 소규모 규제 등 일반 추진분야는 규제법령 소관 부처에서 네거티브 전환 추진
    - \* 34개 부처의 294개 과제를 법제처와 공동 검토하여 100개 전환과제 선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이해갈등으로 규제개선이나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조정 노력 필요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후 관련법령 정비 시, 네거티브 방식 제·개정 적극 고려 필요

## 규제품질관리

### 주요 성과

- 규제비용 감축제 도입을 통한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 경감
  - 규제 완화 및 신설·강화 억제를 통해 759억 원의 규제순비용 감축, 규제비용 감축율( $\frac{Cost-out}{Cost-in} \times 100$ ) 224% 달성
    - ▶ 사례 (문체부)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합리화(-176억원), (과기부) 기업 부설연구소 인력요건 완화(-164억원) 등
- 경제규제 일몰설정 의무화 및 주기적 정비 등 규제일몰제 내실화
  -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규제들은 일몰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주기적 정비,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 추진
  -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1,755건 중 333건 폐지·개선(폐지 8, 개선 325)
    - ▶ 사례 (산업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확대(네거티브 형태로 전환), (환경부) 총량관리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유예기간 연장(1년), (국토부) 음주운전 등 사고 구상한도 삭제 등
- 중요규제 확대를 통한 신설·강화 규제심사 고도화
  - 규제비용 100억원 이하더라도 경제·사회 파급효과,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중요규제로 판단, 심층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사전 차단\*
    - \* ▲ 중요규제 비율: 3.7% → 11.4% ▲ 개선권고 비율 : 61.9% → 77%(12.31 기준)
-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기존규제 정비 역할 강화, 분과위 확대 운영(2개→3개)을 통한 심사 전문성 제고 등 규제혁신 중점기구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상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업·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부처별 비용·편익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설정을 통해 비용감축 성과를 지속 확대할 필요

### 3. 정부혁신 (10점)

#### 1 평가 개요

평가목적

-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중점추진과제와 연계한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범정부 혁신성과 조기달성 지원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평가방법

- 행안부 정부혁신 '전문가 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실시

\* (정부혁신평가단) 학계(15명), 민간 전문가(1명), 연구원(2명) 등 18명

\*\* (국민평가단) 다양한 국민의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발(200명)

- 일반국민 온라인 참여를 통한 국민 체감도 평가도 병행

\* 온국민소통 홈페이지 활용, 10,876명 참여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혁신역량 (15점)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 기관장의 혁신의지 및 관심도	15
혁신 성과 (70점)	소통과 협력	국민소통·참여 정책화 성과	• 국민소통·참여 정책반영	10
		데이터 개방·활용	• 공공데이터 개방	5
			• 데이터기반 업무효율화	5
	선제적 서비스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유통	5
			• 디지털 정부서비스 제공	10
		디지털 민관협력	• 디지털 민관협력	5
			•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10
	유능한 정부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	• 조직문화 개선·확산	10
			• 업무방식 개선	3
			• 협업 활성화	5
• 혁신 공공조달			2	
국민체감도 (15점)		• 국민 체감도 평가		15
가감점 (±15)		• 산하 공공기관 혁신		±15

##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해경청
C	통일부,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정부혁신 평가주관기관(행안부)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 '22년도 주요 성과

- 2022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국민생활에 직결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등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성과 창출
- (소통과 협력) 복지·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전문가 참여 확대\*, 민간 활용 가능성이 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 \* (농식품부) 주민이 축산악취를 입력하면 원인분석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축산악취 알림서비스 지원(연간 악취 민원 감소 '20년 5천여건→'22년상 350건/850여 농가 참여)
  - \*\* (과기정통부) 데이터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Data-Stars/스타트업) 추진(민간투자유치 43.7억,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등)
  - \*\* (농진청) 농업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한 민간의 신규 서비스 창출
    - \* 개방('21년 209건→'22년 251건), 등록('21년 5건→'22년 16건) / 농장별 기상재해 예측서비스(농협), 농사정보서비스(그린랩스)
- (선제적 서비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민관과 협력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보호하는 포용적 서비스 확대\*\*
  - \*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개시, 국민비서 구뵤 맞춤형 알림·상담서비스 지속 확대 등
  - (관세청) 해외직구 수요 증가에 따라 구뵤 연계 통관내역 알림서비스 제공 및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시스템 구축 등 국민편의 제고
  - \*\* (복지부) 회원 가입 없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나비새김' 앱 운영
- (유능한 정부) 협업 활성화·업무방식 개선 등을 통한 정부 역량 강화
  - \* (농진청) '똑똑청년농부'(청년 영농 도우미) 사업에 RPA 도입, 업무시간 단축(△연 353시간)
  - (국세청) 자동심사시스템을 통한 근로장려금 조기지급(320만 가구/법정기한 보다 한달 이상 단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의 정책 참여가 많이 확대되었지만 공모전 등 일방향 참여보다 질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의 연계·통합과 보유 데이터의 API 개방을 통한 민간 혁신서비스 창출 확대 필요



## 4 분야별 평가결과

### 소통과 협력

#### 주요 성과

#### □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 확대

- 국민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정책과정 등 의사결정과정에 국민 참여 강화  
\* (행안부)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한 '주민e직접' 플랫폼 오픈,  
'온국민소통' 가입자 <sup>(21년)</sup>554,880명 → <sup>(22년)</sup>697,494명
- 국민이 직접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관련 정책 개선 의견 반영\*  
\* (농식품부) 주민이 축산악취를 입력하면 원인분석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축산악취 알림서비스 지원  
(고용부) 건물 출입구, 장애물 정보를 추가한 장애인용 도보 내비게이션 제공(240만건 추가)

#### □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발굴·개방 지원

- 사회·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국민편익 증진  
\* 공공데이터 개방 누적건수(<sup>(21년)</sup>66,119개→<sup>(22년1월)</sup>74,229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sup>(21년)</sup>147개→<sup>(22년)</sup>168개)
- 생활편의·안전 데이터 민간 개방\* 및 새로운 민간 서비스 창출 지원\*\*  
\* (행안부) 각종 인허가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데이터 개방  
(기상청) 전국 해수욕장(420개소)의 위치기반 맞춤형 날씨 및 산악예보 API 개방  
(국세청) 사업증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 등록 진위·상태정보 API 개방  
\*\* (과기정통부) 데이터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Data-Stars/스타트업) 추진(민간투자유치 43.7억,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등)  
(농진청) 농장별 기상재해 예측서비스(농협), 농사정보서비스(그린랩스) 등 민간 비즈니스 창출

#### □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민관이 협력하여 생활 밀착형 협업성과 도출\*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  
\* (복지부·의료기관) 의료기관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헬스웨이' 앱 개통  
(식약처·기업) 편의점 4개社 협업, 품질인증식품 판매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신설  
\*\* (환경부·기업) 전자영수증 발급 등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산림청·광양시·포스코) 부지제공, 식목, 산림치유사업 운영으로 탄소 상쇄 도시숲 조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설문 등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국민의 서비스 경험에서 행정서비스의 개선할 점을 발굴하여 정책 기획부터 개선·피드백까지 전 과정에 적용 필요

## 선제적 서비스

### 주요 성과

#### □ 국민이 찾기 전에 선제적 공공서비스 발굴·지원

##### ○ AI,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안내·제공\*

\* (농식품부) 농민에게 품목별 병해충, 농약, 경매정보 등을 알려주는 영농비서 '농업on' 앱 운영  
(국세청) 질문에 답변만 하면 세금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알려주는 'AI 세금비서' 신설/  
클릭 한번으로 소득세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 소득세환급금 지급(6,202억)  
(농진청) 과수화상병 위험예측 모델을 통해 사과배 농가의 과수화상병 예방(손실보상비 282억↓)

##### ○ 간편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제공\*

\*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개시, 국민비서  
구삐 맞춤형 알림·상담서비스 지속 확대 등  
(관세청) 모바일로 여권을 자동인식하는 여행자 세관신고 플랫폼 구축으로 여행자 편의 개선

####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실현

##### ○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과기정통부)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ebs 등 교육콘텐츠 데이터이용료 지원(월6,600원)  
(복지부) 회원 가입 없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나비새김' 앱 운영(22.11월 91건)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문서를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신규 제공(27종)

##### ○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복지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지원수당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개선

#### □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 ○ 데이터 수집 확대 및 ICT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 안전 강화\*

\* (과기정통부) 승강기 내 쓰러짐 폭행 등 지능형 모션감지 기능을 도입한 승강기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기상청) 민간 교육앱과 연계, 학교 위치기반 기상특보, 비/눈예보를 등교 전날 알림서비스로 제공

##### ○ 데이터 연계와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한 절차비용 절감 및 국민 불편 해소\*

\* (복지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자격연계를 통한 노인의 기관 방문 발급 면제(135,000건 면제)  
(환경부) 국립공원예약시스템에 간편 로그인, 카카오페이 등 민간 간편결제 방식 추가  
(고용부)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연계하여 산재유족 보험급여 신속지급(114만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양질의 원천 데이터, 유관기관 및 민관 융합 데이터에 대한 전략적 발굴 노력 필요

## 유능한 정부

### 주요 성과

#### □ 모든 세대가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개선 추진

##### ○ 업무 간소화\*, 수평적 사무실 디자인\*\* 등을 통해 업무 환경 개선

\* (농진청) '똑똑청년농부'(청년 영농 도우미) 사업에 RPA 도입, 업무시간 단축(△연 353시간)  
(기상청) 전 직원 참여, 불필요한 업무 60건 발굴, 39건 축소

\*\* (고용부) 직원이 직접 종이모형 활용, 사무공간 디자인하는 'DIY 업무공간 혁신' 추진

##### ○ 자유로운 소통\*과 혁신사례 공유·학습\*\*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역량 함양

\* (환경부) MZ세대-장관과의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 불편해소 아이디어 발굴(1회용 컵 보증금제)

\*\* (행안부) 중앙부처·지자체 등 조직문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실시(6회)  
(농식품부) 민간기업 조직문화 벤치마킹(SK그룹), '관행격파왕 선발대회' 개최

####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

##### ○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및 연구개발\*\*을 통한 업무 효율화

\*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비대면 온라인 신청 도입(방문비용 47억원, 인쇄종이 4백만장 절감)

\*\* (식약처) 농수산물 검사키트 개발 등을 통해 검사 시간 단축(당초 5일→ 개선 6시간)  
(산림청) 항공사진 분석 딥러닝 분석시스템 활용으로 국유림 무단점유 현장실사 시간 단축

##### ○ 단순·반복업무의 자동화\*로 업무시간 단축 및 생산성 제고

\* (고용부) 산업재해 보상보험업무에 RPA를 도입하여 처리기간 단축(△연간 67,570시간)  
(중기부) 중기 연구개발(R&D) 평가 프로세스에 RPA 도입, 업무효율화(△업무시간 82%)  
(국세청) Paper-less 세무행정 구현을 위한 '홈택스 자동접수·등록시스템' 구축  
(농진청) '똑똑청년농부'(청년 영농 도우미) 사업에 RPA 도입, 업무시간 단축(△연 353시간)

#### □ 중앙-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 ○ 각 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 협업을 통해 업무 시너지 상승

\* (문체부)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을 위해 6개 부처의 14개 사업에 대한 업무 조율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수출 계약 증가 등

(중기부) 정부-대기업-중소기업 간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해 생산성·품질 향상, 산업 재해의 현저한 감소 성과 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기관 별 세대·직급 간 소통 노력은 확인되나, 조직 사회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문화 혁신사례 공유와 전파 노력 필요

## 4. 정책소통 (20점)

### 1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성과 체감 확산

####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관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 평가방법

- 각 기관별 정책소통 활동,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정량평가는 각 지표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관별 실적을 산출·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단'을 구성·운영(12개조, 6~7명씩)하여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성과 자료를 객관적·전문적 평가
- 체감도는 소통만족도와 온라인 체감도로 구분하여 정량·정성평가
  - 소통만족도는 주요정책 평가와 병행하여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소통 노력 및 성과에 대해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평가 (국조실 주관)
  - 온라인 체감도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통해 국정 현안 및 부처 정책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분석 평가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소통 활동	부처협업 활동	대변인·온라인대변인·외신대변인협의회 협업	15
	보유자원 활용	보유매체 활용, 국민기자단 활용 등	
소통 성과	주요정책 소통성과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 정부광고 컨설팅, 소통활동 우수사례	55
	현안대응 성과	일일보도 대응 성과, 온라인현안 대응 성과	
	온라인 소통성과	누리소통망(SNS) 활성화,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양방향 소통,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제작 우수사례, 디지털 캠페인 활동 성과	
	기관장 소통성과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외신 소통성과	외신소통 실적 및 우수사례	
체감도	소통만족도 온라인 체감도	주요정책 소통 관련 국민만족도 조사,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30
가감점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 보도자료, 보고서, 누리집 첫 화면 점검	±2

##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인사처, 식약처,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방사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
C	외교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조달청, 병무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정책소통 평가주관기관(문체부)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 '22년도 주요 성과

- 새 정부 국정기조에 부응한 소통활동 전개로 주요정책 성과 확산
  - 기관장 중심의 대국민 언론 및 현장 소통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 증진
    - \* (중기부) 손실보전금 관련 관계자 언론·현장소통을 통해 신속한 정책집행 추진 (산림청) 산불현장 기관장 브리핑(20회) 실시 등 책임 있는 정부 모습 부각
  - 주요정책 발표 사전협의\*를 충실히 반영한 정책홍보로 정부 신뢰도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 (농식품부) '물가안정' 관련 정부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명, 국민 불안 해소 (기상청) '한국형 지역수치예보모델' 발표시 기상예보의 정확도 등 정책신뢰도 향상
  - 오보 및 부정이슈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정확한 알 권리 충족
    - \* '22년 일일 보도대응 1,180건 / 온라인 현안대응 1,195건
    - \* (복지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관련 오류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접종률 향상 (경찰청) 보이스피싱 관련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광고 제작 등으로 피해 확산 방지
-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온라인 소통 활동으로 국민 공감대 확산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정책홍보 여론분석 및 국민 의견수렴 등에 활용, 과학적 정책소통 기반 확대
    - \* (농식품부)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곡물 공급 불안 등에 대해 빅데이터 취합 분석자료로 물가안정 대책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국민 참여형 양방향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 정책 수용성 제고
    - \* (전년 대비 구독자 증가율) 유튜브 18.2%, 페이스북 68.4%, 인스타그램 9.3%, 트위터 50.7%, 블로그 4.8%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소통 활동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제고 및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강화 필요
- SNS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전략 수립 및 정책소통 대상 명확화 필요

## 적극적 소통활동을 통한 주요정책 성과 확산

## 주요 성과

- 새 정부 출범 계기, 적극적 소통활동으로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성과 확산
  - 주요정책 소통 관련, 범부처 참여 소통회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소통 기본방향 공유, 일관된 메시지 전달 및 범정부 현안 공동 대응\*
    -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회의 등 활용, 정책소통 활동 체계화 및 부처협업 추진
    - \* (현안대응) 코로나 19 대응, 집중호우 피해대책, 부동산 대책, 고물가 부담, 택시 승차난 해소 등
  - 새 정부 출범 이후('22.5월~), 기관장 중심의 대국민 언론 및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 증진
    - \* 월평균 28.4회(전년 대비 14% 증가, '21년 24.9회)
    - \*\* (고용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등 제도보완 (중기부) 손실보전금 관련 관계자 언론·현장소통을 통해 신속한 정책집행 추진 (산림청) 산불현장 기관장 브리핑(20회) 실시 등 책임 있는 정부 모습 부각
- 정책소통 및 위기관리 이슈 대응 관련 부처 역량 강화로 소통성과 제고
  - 각 부처 주요 정책 및 현안 이슈에 대한 핵심메시지, 내용 등에 대해 사전협의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부처의 정책소통 역량 제고
    - 사전협의(5~12월 기준) 참여실적 1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
    - \* (과기부) '다누리 궤도진입 결과 발표' 맞춤형 기획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긍정적 평가로 정부 이미지 향상 (농식품부) '물가안정' 관련 정부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명, 국민 불안 해소 (기상청) '한국형 지역수치예보모델' 발표시 기상예보의 정확도 등 정책신뢰도 향상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오보·왜곡 보도 확산 방지 및 긍정 여론 전환 등으로 정책신뢰도 제고
    - \*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소통과 준비 없는 정부라는 언론기사에 신속대응, 소비자·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 의미 부각 (복지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관련 부정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접종률 향상 (경찰청) 보이스포싱 관련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광고 제작 등으로 피해 확산 방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소통 활동이 주요정책 성과확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장의 소통 관심도 제고 및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환류 강화 필요

## 온라인 소통활동 강화로 국민 공감대 형성

### 주요 성과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소통기법 활성화
  - 오프라인 여론조사 등과 병행, 정책발표 효과측정, 현안쟁점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홍보·여론 분석을 하여 정책소통에 적극 활용
    - \* (농식품부)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곡물 공급 불안 등에 대해 빅데이터 취합 분석 자료로 물가안정 대책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 (기상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상정보 위험시 긴급 재난문자 방송 송출체계 구축
  - 국민여론 수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활용 정례화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책의 완성도 강화
    - \* (경찰청) 방범용 CCTV 설치지역 선정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 필요한 장소에 적시 설치하여 예산 절감 및 국민안전 강화
-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국민 체감형 콘텐츠 제작으로 국민소통 확대
  -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호응 유도
    - \* (고용부)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 관련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여 긍정 평가 확산 (산업부) 반도체, 수소모빌리티 등 어려운 주제들을 흥미롭게 다루어 이해도 제고 (식약처)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한다' SNS콘텐츠 제작으로 양방향 소통 실현
  - 크리에이터 협업, 예능형식 등을 활용, 다양하고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홍보하여 정책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및 긍정 반응 확산
    - \* (과기부) '과학의 申봉선'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예능형식으로 전달, 장·차관이 직접 출연하여 콘텐츠 완성도 제고(4편, 총 조회수 31.5만회)
    - (고용부) 개그맨(김용명) 등 핫한 크리에이터와 협업제작(평균 조회수 5만, 댓글수 300만)
    - (기상청) 지진 관련 연예인(지진희)을 캐스팅하여 흥미 유발(총 조회수 277만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처 간 소통활동의 편차를 줄이고 효과적인 성과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소통 빅데이터 활용기법 학습 제공과 정보공유 필요
  -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바탕한 ▲효과적 이슈대응 ▲캠페인 기획 ▲콘텐츠 제작 등 우수사례의 정례적인 공유·확산
- SNS 채널별 특성 고려, 맞춤형 운영전략 수립 및 정책소통 대상 명확화



## 5. 적극행정 (가점 3점)

### 1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 및 체감 성과를 기관별로 점검·평가하여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일상화 지원

####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 평가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정량평가) 기관의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보통 등급 부여, 초과 달성시 달성 정도에 따라 상위점수 부여
  - (정성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적극행정 추진성과' 항목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별도 평가하여 합산
    - \* 적극행정 및 정부 업무에 대한 이해와 평가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 10명
- '적극행정 체감도'의 경우 별도 용역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30)	• 실행계획의 적극성·창의성, 제도개선 노력도	5
	• 기관장 적극행정 이행노력도	4
	•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8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실적	6
	• 교육 활성화 노력도	2
	• 홍보 노력도	5
적극행정 추진성과 (40)	• 주요성과 제출 실적	5
	• 우수성과 창출	35
적극행정 체감도 (30)	• 국민 적극행정 체감도	20
	• 공무원 적극행정 체감도	10

##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농진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	법제처,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C	통일부, 문체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방사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적극행정 평가주관기관(인사처)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 '22년도 주요 성과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통해 제도적 보호 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함으로써 각 부처의 규제혁신 중점 추진에 동력으로 작용 기대
-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시범운영\*, 일상적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다양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독려
  - \* 6개 중앙행정기관 : 농식품부, 환경부, 인사처, 식약처, 특허청, 해경청
- 국민 불편 해소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과제를 기관 간 협업으로 해결
  - \* (경찰청·행안부·도로교통공단·조폐공사)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현장 방문 후 성과를 직접 보고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단' 신규 도입
  - \* <예선> 1·2차 예선 → <본선> 국민심사단 현장 방문 및 인터뷰 심사, 사례 발표
- 코로나19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단초 제공
  - \* (국방부) 軍관사 부지 제공으로 청년층 주택문제 해결안 제공, (관세청) 시내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 소극적 행태 지적, 공무원 소극행정 행태 타파를 위한 예방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부처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적극행정의 개념 정립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 및 수용력을 제고할 필요

### 적극행정 실천 노력 다각화

#### 주요 성과

-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상 보호 방안 마련 및 제도 사각지대 해소
  -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 및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대상 확대 개정, 보호 기반 강화('22.12.27 시행)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포함시켜 규제혁신 중점 추진 동력으로 활용 가능
  -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제도의 **활발한 활용**, 체감형·현장형 적극행정 실천
    - 사례** : (해경청)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통해 경찰관 의료행위 특례 적용 등에 대한 해상 응급환자 관련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국민생명 골든타임 확보  
(중기부) '사전컨설팅' 활용,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속 지급으로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강화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와 연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 실천 및 국민 참여 통해 사회 파급적 시각에서의 추진성과 제고
  - 새 정부 국정과제 지원 및 성과 관리 강화 위한 기관별 적극행정 노력 지속
    - 사례** : (농진청) 식량자급률 향상,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등 국정과제 관련 청장 주재 '중점과제 협의회' 운영 등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 위한 추진방향 설정 및 점검체계 마련
  - 국민 편의성 증대 위한 추진과제 선정 및 기관 간 협업으로 적극행정 추진
    - 사례** : (경찰청·행안부·도로교통공단·조폐공사)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국민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성과 우대를 위해 현장 방문 후 성과를 직접 보고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단' 신규 도입·운영
-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통한 범정부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보상 확대로 적극행정 실천 동기 확산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도입·시범운영
    - \* ('22년) 6개 중앙행정기관 시범운영 → ('23년) 시범운영 성과분석 후 단계적 확대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 소극행정 행태 타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체감형·현장형 성과 창출

### 주요 성과

#### □ 새로운 정부의 국정성과 신속 창출에 기여

- 국가정책의 국민체감 확대를 위해 부처별 핵심 적극행정 추진과제를 매달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공유 → 최우수사례 차관회의 발표

\* '22.5월부터 총 747개 추진성과를 제출받아 58개 우수사례 선정, 7개 최우수 사례 차관회의 발표

**사례** (중기부) 적극행정토 의결로 수의계약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시스템 신속 구축 및 추경통과 4일 만에 325만개사 대상 19.8조원 지급  
(환경부) 대형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을 통합·탄력 운영  
(국방부) 수도권 軍관사 부지의 용적을 상향 및 군관사와 민간 공공주택 신축('27년까지 총 3,209호 공급)

#### □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성 있는 규제 적시 해결

-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에서 업무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미시적인 규제 사항을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

**사례** (교육부) 재해예방 특별교부금 지원절차를 先교부-後검토 체계로 변경하여 재난발생 지역 교육시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지원 소요 약2.5개월 → 3주)  
(산업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  
(식약처) 밀키트에 포함된 식품의 보관·유통 조건을 기술력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식품업계 소비트랜드 반영

#### □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국민생활 안정화 지원

- 수혜적인 법령과 제도를 융통성있게 해석·운영함으로써 복지제도의 미비점 즉각 보완

**사례** (국세청) 산불 피해 주민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행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및 심사과정 간소화로 법정기한을 2개월 단축해 지급  
(보훈처·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급여금 제외로 1.5만명 신규수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 부처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적극행정 개념 정립 필요

- 장·차관급 또는 집행·기획·지원부처별 업무 차이로 적극행정의 행태도 다양하게 발생하나 여전히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적극행정 기준 부재

\* 민원과 접점이 크고 정책 집행을 주로 수행하는 부처(예시: 환경부, 중기부, 관세청 등)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주요사례 발생

## IV. 후속조치 계획

## □ 평가결과 공개

- 공개범위 : ▲ 부문별·기관종합 각 부처 '등급' (A·B·C)  
▲ 주요정책 등 부문별 주요실적,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개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 포상

- '기관종합 및 부문별 A' 등급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은 부문간 배점 비중 차이를 고려하여 배분
    - \* 배점 비중 : 주요정책(50%), 규제혁신(20%), 정부혁신(10%), 정책소통(20%)
- 유공 포상 약 30점(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 □ 개선·보완 필요사항 후속조치

- 평가시 지적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부처별로 개선 추진  
→ 후속조치 추진결과 점검 (연말 평가 반영)